

“10% 성장 이끈 기업가정신” 하버드도 연구했다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6

KDI 재직 초반에 나는 정부의 제4차 5개년 계획 기간(77~81년) 중 저축증대와 내자동원 효율화를 위한 자본시장 육성책 마련 등의 단기 과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74년에 시작된 아시아 9개국 네트워크 공기업 연구 총책임자로 해외 출장만으로도 바빴다. 그리고 후반에는 제5차 5개년 계획(82~86년)을 위한 KDI 정책협의회 총괄, 대국민 경제교육 등에 상당한 시간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경제과학 심의 회의의 자문관(79~80년),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수석자문관(81~82년) 파견 근무와 KDI 부원장 직도 맡았다.

그러나 75년부터 KDI와 미 하버드대 국제개발연구원(HIID)이 공동추진한 한국 경제·사회 근대화 과정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이 공동연구의 미국측 대표 집필자였던 하버드대 에드워드 메이슨 교수는 한국경제의 경이적 발전에 관한 두 가지 근본적 질문을 갖고 이 연구에 참여했다. 메이슨 교수는 일찍이 미국경제학회장,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학장을 역임한 당시 미국 중진 경제학자로 하버드대의 국제경제개발 자문기구인 HIID 설립자였다.

60년대 고도성장 뒤엔 기업가정신 사익 추구하는 기업가는 원래 있어 금전적 유인책, 사회적 인정 통해 생산적 기업 활동으로 유도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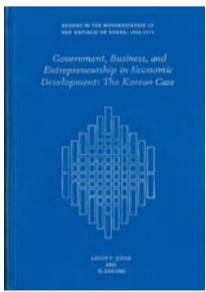
우선, 연 2~3% 성장하던 한국경제가 60년대에 들어와 어떻게 갑자기 10% 수준의 성장을 할 수 있었나. 수입한 것도 아닌데, 어디서 고도성장을 이끈 민간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왔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정부의 경제 성장 목표를 항상 초과 달성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이다. 당시의 중남미 여러 나라나 인도·파키스탄 등과는 대조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경제계획과 경제정책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기존의 경제학 이론만으로는 해답을 찾기 어려운 이 과제를 보스턴대의 리로 이 존스 교수와 내가 맡게 된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은 새로운 경제발전 이론을 정립한다는 자세로 연구에 임했다. 연구 결과는 하버드대 출판부가 『경제개발과 정부 및 기업가의 역할(Government,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in Economic Development)』 책자로 80년에 발간했다. 다행히도 이 책은 경제학 뿐 아니라, 정치학·행정학·사회학·경영학 분야에서도 자주 인용되었다.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책 출판 이전에 KDI와 공동 토론 회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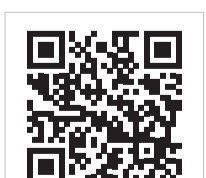
기업가정신에 관한 우리의 연구 결과는 명확했다. 정부의 올바른 정책과 제도가 관건이란 것이다. 60년대 이전에도 잠재된 기업가정신은 있었다. 단지 경제적 유인책과 비금전적 동기 부여가 충분하지 못해 현재화되지 않았거나,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기업활동으로 이어질 수



1978년 7월 한국 경제가 60년대 이후 급성장한 원인을 분석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공일 KDI 연구부장(왼쪽 위)의 『경제개발과 정부 및 기업가의 역할』 출판을 앞두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이 마련했다. [사진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1980년 하버드대 출판부에서 발간한 『경제개발과 정부 및 기업가의 역할』 영문판(사진 위)과 이듬해 나온 한글판 표지.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The JoongAng Plus에서 연재 중인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시리즈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없었을 따름이다. 정부의 수입 라이선스 획득이나 외환배분 특혜,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치부는 가능한 각종 ‘지대 추구(rent-seeking)’ 기회는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금융·외환 제도 개혁과 함께 각종 유인 시책으로 모든 기업가정신을 생산적 기업 활동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가치부여 등 비금전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조중훈 회장, 김우중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과 각각 장시간 면담했다. 특히 정주영 현대 회장과는 울산 현대 조선소 내 영빈관에서 1박 2일간 숙식을 같이하며 면담했다. 우리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메이슨 교수도 모든 면담에 참여했다. 이미 언론보도와 자서전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 현대 조선소 건설 관련해서 정 회장의 흥미로운 일화들을 이 면담에서 직접 들었다. 조선소 부지 모래사장 사진만을 들고 영국으로 돈 빌리러 갔던 일, 배 주문을 받아서 오면 돈 빌려주겠다고 해서 그리스로 가서 거북선 그려져 있는 500 원권을 내놓고 설득해 대형 유도선 3척 주문을 얻어낸 일화 등이다. 조선소 지으며 동시에 건조한 배를 납기 이전에 인도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도 들었다.

면담 중에 내가 정주영 회장께 “박 대통령의 권유도 있었지만, 건설업을 해오던 정 회장께서 어떻게 조선을 하겠다고 엄두를 내었느냐”고 물었다. 답은 간단했다. “아, 조선은 물 위에 배 띄어놓고 건설하는 것이니, 전혀 나에게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이병철 회장은 남대문 근처에 있는 구 삼성빌딩에서 우리 세 사람과의 면담 시간을 가졌다. 이 회장은 일찍이 생활필수품의 수입 대체가 국가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신념에서 제당과 모직부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 제조업 진출에 대해 주변의 반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견 희 당시 부회장이 이 면담(78년) 처음부

터 끝까지 배석했다.

정부의 각종 유인책과 제도개혁에 힘입어 민간 기업가정신이 최대한 발휘되어 한국 경제는 2~3%대의 성장에서 10%대의 성장이 가능했다. 그 과정에서 성공한 기록을 갖고 있는 소수의 뛰어난 기업가들에게 정부의 정책적 혜택이 솔리게 되어 ‘경제력 집중’은 이 기간에 계속 심화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KDI의 논문 계간지인 『한국개발연구』 1980년 봄 호에 ‘경제성장과 경제력 집중’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이례적으로 80년 4월 5일자 동아일보 1면 6단 머리기사로 실렸다. 이 논문에서 내가 사용한 ‘경제력 집중’이란 개념은 그 이후에 대중화된 용어로 널리 쓰여지기 시작했다. 그전에도 개별산업이나 기업 집중이란 전문적 용어는 널리 쓰였다.

그러나 나는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재벌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이 용어를 처음 쓴 것이다. 정부는 86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 나는 경제력 집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벌의 총매출액 대신 모든 재벌의 총 부가가치가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추계했다. GNP는 부가가치 개념이기 때문이다. 46개 재벌의 개별기업(78년 총 421개)의 재무제표를 구해 각 기업의 부가가치를 일일이 계산했다. 그 작업 자체가 쉽지 않았다.

재벌그룹

1981년 6월 서울에서 열린 한국 근대화 과정 연구 국제 학술회의. 에드워드 메이슨 하버드대 교수가 KDI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사진 사공일]

대기업 중심 고도성장 부작용도 소수 기업에 ‘경제력 집중’ 심화 성장 초기 경제의 불가피한 현상 금융자유화·공정거래 강화 강조

을 82년 말에 EPB로 보냈다. 이 초안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수입자유화 논쟁의 불씨가 되었다. 물론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공부는 EPB가 주도하는 산업지

원제도 개편에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당시 박성상 원장(한국은행 총재 역임)이 이끄는 KIET는 KDI에 비해 수입자유화에 훨씬 소극적이었다. 실제 박 원장은 수출입은 행장으로 전보되고, 내가 그 후임으로 가게 된 것이다. 그 이후 몇 달간 정부 안에서는 수

입자유화 논쟁이 이어졌다. 결국 상공부는 크게 물러서 85년 수입자유화율 77% 수준에서 86년까지 90% 수준까지 높이는 수입자유화 연도별 예시 계획을 내놓게 됐다. 공교롭게도 당초 파격적 KDI 안을 주도한 김기환 KDI 원장이 85년 10월에 상공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상공부의 수입자유화는 김 차관 주도로 그 이후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5, 10, 20, 46대 그룹)의 성장 분석에서 재벌 그룹은 일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성장했을 뿐 아니라, 대재벌일수록 소재별에 비해 고속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73~78년간 경제력 집중은 심화하였다. 불가피하게 경제개발 초기 단계 특히 정부 주도로 중화학공업 육성을 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기업가들이 이끄는 기업에 더 많은 금융·세제상 혜택과 유리한 정책적 배려가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제 이러한 정부 주도의 발전 전략은 바뀌어야 한다. 특히 금융자유화를 위한 모든 개혁을 서둘러야 하며 공정거래와 독과점 규제의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행히도 금융자유화 시책은 정부가 꾸준히 펴왔으며, 86년에는 이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있었다.

KDI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오던 중 83년 초에 정부인사 방침에 따라 내가 KIET(당시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원장으로 내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다.

이즈음 정부 내에서는 경제기획원(EPB)-KDI와 상공부-KIET 간에 ‘수입자유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82년 초에 EPB가 KDI에 산업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의뢰했다. KDI는 당시 통념으로는 파격적인 수입자유화 방안이 포함된 산업지원제도 개편 초안